



5대 은행, 주담대 금리상당 7.3% 돌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39~7.33%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고정금리 상단이 7.3%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0월 말(7.33%) 이후 3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뉴시스

美, 이스라엘 첩보 경계... 동맹 이상신호

일각선 상호간 보안조치 강화 관측

중동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간 동맹전선의 균열 여부가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 이란전쟁에서 엇박자를 보여 왔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간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NBC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이스라엘의 대미 첩보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는 레바논 헤즈볼라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NBC는 5일(현지시간)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방첩 위협 수준을 '크리티컬'(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전·현직 관료 3명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 내 비밀활동 및 의사결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이 같은 이스라엘의 정보수집 활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정보국은 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인적 정보활동과 기술 정보수집 능력을 모두 '심각' 수준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보고서에 나열한 것으로 전

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이 보도 전체는 사실과 다르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스라엘 대사관도 "미국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스라엘은 미국 기관은 물론 미국 정부 관료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냈다. 또 정보수집 대상은 동맹국이 아닌 적국이라고 부연했다.

전·현직 미국 관료는 동맹국 간 정보수집 활동은 빈번히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근 행보는 통상의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상대방에게 '미쳤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 내용을 시인했다.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위해 대 이란 외교협상을 추진해 온 데 반해, 네타냐후는 이란 영토 공습 재개와 헤즈볼라 압박 강화를 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 간 상호 방문이나 접촉 과정에서 보안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AI 혁신 등 성장·민생 책임질 책임자 판단"

>> 1면 '李, 총리 후보에 한성숙'서 계속

또한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지면 반도체 호환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려도 과히 틀리지 않다"고 했다.

1967년 경기 의정부 출생인 한 후보자는 1989년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전문지 편집 기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기업 엠프스창립, NHN(네이버 전신)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서비스1본부장,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5년 간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기술 기반 성장을 주도했다. 웹툰, 웹소설 콘텐츠 확장에도 집중한 끝에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한 후보자는 AI 혁신과 또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또 중기부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그 바탕에 민간에서 쌓은 혁신 마인드와 개혁 의지, 그리고 모두가 성장해야 된다는 상생의 철학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정부, 장특공·보유세 손 보나 부동산 시장 '세법개정' 술렁

지선 마무리... 세제개편 가시화
李 대통령, 비거주자 감세 비판
종합부동산세 등 도마 위에 올라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세법개정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관련 세제 해택에 대해 지적을 반복한 만큼 세제 개편에도 반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 유예가 종료된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개편과 함께 보유세 강화,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증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축소하는 법안이 복수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 초과주택도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2년 이상(공제율 16%)부터 10년 이상(공제율 80%)까지 거주기간별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토지나 건물, 조합원집주권 등 비주택 자산의 경우 공제를 아예 폐지



지난 달 28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토록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뀌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비거주 투자용 감세는 투기 관장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버티기 예상 보도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 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등록임대사업자 해택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는 의무임대 조건을 충족했다면 의무기간이 끝났더라도 양도세 증가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증가 제의를 불합리하다며 지적한 이후 관련 부처장들도 연달아 제도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연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AI 활용 근무자, 평균 업무시간 3.8% ↓

한은 AI 도입 초기 3년 효과 분석
전문직·사무직 중심 시간절감 효과
생산성 연결 미흡... 정책설계 관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근로자의 업무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뚜렷하지만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는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가 개별 작업의 효율은 높이고 있지만 업무 흐름 개선과 조직 구조 변화, 인력 재배치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이른바 '생산성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7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의 BOK이슈노트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는가? 초기 3년의 효과 분석'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근로자의 평균 업무시간은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주당 약 1.5시간을 절감한 셈이다.

연구진은 절감된 시간이 모두 생산 활동에 다시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적 생산성 향상 효과가 약 1.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AI가 적어도 개별 업무 단위에서는 생산방식을 바꾸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사무직, 관리직에서 시간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작업별로는 교육자료 개발, 통계분

석, 모델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지적·비정형 업무에서 AI 활용 효과가 두드러졌다. 업무 조율이나 장비 운용처럼 고맥락 판단이나 물리적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시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 절감이 곧바로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절감률과 업무처리량 증가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0으로 나타났다. AI를 통해 일이 빨라졌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산출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를 '생산성 단절'로 설명했다. AI가 문서 작성, 데이터 정리, 분석 보조처럼 개별 작업의 효율은 높였지만 절감된 시간이 고부가가치 업무로 재배치되지 못하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 구조 변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집단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 전문직, AI 고강도 사용자 등에서는 시간 절감이 실제 업무처리량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성과가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거나 업무 자율성이 높은 경우 AI를 통해 아낀 시간을 추가 업무나 업무 고도화에 투입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재의 AI 확산이 기업 단위

의 체계적인 업무 흐름 변화보다 개별 근로자 단위의 활용에 머물러 있다고 봤다. 실제 기업의 AI 활용률은 2024년 기준 9.6%로 근로자의 업무용 생성형 AI 활용률 51.8%와 큰 격차를 보였다. AI 사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업 조직 전체가 AI에 맞춰 재설계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현재 AI가 '효율성' 단계에는 진입했지만 아직 '생산성' 단계로 충분히 전환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범용기술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환 과정으로, 과거 정보통신기술 확산기에도 생산성 개선이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정책 방향도 단순한 AI 보급 확대보다 AI를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화된 업무에서는 AI를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중심축으로 배치하고, 절감된 시간을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옮기는 조직 차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관찰되는 생산성 단절은 기술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범용기술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환 과정"이라며 "향후 정책 목표는 AI 확산이 아니라 효율성 증가를 생산성 증가로 전환시키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